

제1회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 토 론 1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박 대 호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사무국장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박대호(충북사회적경제센터 사무국장)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한다. 지난 수년간 한 사회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환경, 생태, 경제, 식량, 사회적 위기는 수많은 도전자를 양산해 내고 있다. 우리는 승리의 여신이 도전자의 편에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하지만 그뿐이다. 여전히 응전의 토대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 힘의 대단함과 세력의 광활함에 혀를 찰 뿐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월러스틴은 그의 저서“세계체계 분석”의 끝 무렵에 이렇게 이야기 한다. “결국 세력관계에 의해 다음 세상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이다. 안타깝게도 필연적 낙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지금 우리에게 미래가 달려있다.

최근 사회적기업에 이어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 두 제도 모두 정부주도로 만들어졌고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정치적 판단이든, 시민사회의 노력의 결과든 누구의 손을 들어 주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다만 사회적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세계화로 인한 지역의 문제를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화전략으로 대안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역사 이래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몬드라곤이나 볼로냐의 성공적인 사례는 대안을 갈구하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에서 협동조합의 제도화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시켜 줄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기업에 이어 또 하나의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차분히 대응하면 좋겠다.

사회적기업이 제도화 된 이후에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리고 적지 않은 실망이 진행형에 있다. 물론 이런 실망은 부정적인 일면만 반영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고 정부의 주도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일반화 되면서 사회적기업에 기대하는 사회적 목적과 사회적 역할은 퇴색하고 창업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안타까울 뿐이다. 더구나 사회적 필요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에 발빠른 사람들의 전유물로 기우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제도의 문제인지 차분히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모습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제도만을 탓하며 실망했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 사회적기업의 모습이 과연 제도의 탓인가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할 지점이 많은 것 같다. 사회적기업 육성제도는 시민사회에게 사회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지역의 필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역할을 부여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그리 건강하다고 인식되지 못하는 듯하다.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논의를 할 때면 인증요건 구비에 초점을 맞추는 대화에 피로감이 몰려온다.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내자는 가슴 뛰는 제안은 지루한 무용담으로 비춰지는 듯한 분위기다. 우리에게 사회적기업은 어떤 의미일까? 혹시 협동조합도 같은 과정을 되풀이 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협동조합자체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가능한 치열하게 원래의 취지에 복무하는 것이다.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성공한 사회적기업에는 뺏속까지 사회적목적을 새긴 기업가가 있었다. 그렇다면 결국 답은 협동조합을 하고자하는 주체의 발견과 재생산에서 찾아야 하는 게 아닐까? 주체의 준비 없이 협동조합이 아니라 그 할애비가 오더라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다행히 사람이 찾아들고 있다. 지역마다 조직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과 함께 원칙과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하겠다.

다시 사회적기업을 거울삼아 보면 우리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참 많은 것들을 유보하며 살고 있다. 구성원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수익의 사회환원, 취약계층의 일자리 등등 기능적으로 법적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양산한 우리는 이제 냉담한 시선으로 사회적기업을 바라본다.

정부도 시민사회도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이야기 한다. 지금까지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명제인 것 같다. 과연 그럴까? 사회적목적을 충실히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이 존재의미가 있는 것일까? 차라리 사회적목적에 관심을 집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사회적목적을 달성하는 유형으로 일자리제공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자리제공과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추구하는 혼합형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제공만으로 사회적 목적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이라는 의견에는 다양한 문제제기가 따르고 있다.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란 굳이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일반기업에 재정지원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혹은 사회서비스 제공만으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시각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의미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사회적'성격이다. 이는 '공익적'측면을 이야기 하는데, 주요하게 활동의 내용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표현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기업에 의해 수행되는 사회적 목적들로는 취약계층의 노동통합, 사회서비스의 전달, 낙후지역 지역발전, 친환경적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목적과 활동들은 일반적으로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국가의 역할이었거나 사회복지 전달체계들이 국가를 대행해서 담당하던 영역이었다. 사회적기업은 이러한 '사회적'목적을 수행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역할을 보다 혁신적이고 효과적으로 분담하

면서 공공부문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성격으로 사회적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개인들의 연대적 관계망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적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기술, 경영능력을 교육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장기실업, 장애,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배제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성격이 없다면 기존의 기업 혹은 정부나 사회복지전달체계와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사회적기업은 활동 내용 자체보다 활동의 궁극적인 지향과 이를 실현하는 방식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회적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5년짜리 프로젝트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나은 접근이 아닐까? 그 다음은 5년 후에 다시 고민하고 말이다. 사회적기업의 생존전략은 사회적 목적을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생존은 이러한 지역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논의는 협동조합에도 시사점을 준다. 협동조합의 근본 취지가 아닌 창업의 한 유형으로 확산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변방에서 다른 대안을 찾아 헤맬 것이 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하향식 운영에 우려를 가지는 것은 중요한 지점이다. 하지만 일방적인 불멘소리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정말 정부의 정책이 문제인가? 정부가 만들어주는 여건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이를 제대로 방향을 설계하고, 지역에서 내용을 채워가는 주체의 문제에 더 많이 눈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또다시 변방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지역마다 자각하고 실천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홍기빈은 사회적경제는 살림살이와 관련된 영역이고 인간발전 원리를 담아야 한다고 한다.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이 이러한 내용을 충실히 담도록 노력해야 한다. 협동조합 안에서 내가 어제의 나보다 더 낮고 풍부한 인간이 되었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사회적기업에게 빠져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더욱 아프게 생각되는 부분이다. 협동조합은 기업활동 이전에 살림살이와 인간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운동은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더 풍부해지는 과정 이어야 한다.

발제문에서 강원지역의 네트워크 주도형 생태계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원주를 비롯한 춘천 등의 지역에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히 진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에서는 강원도의 네트워크 현황을 업종과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현안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여전히 외형적 규모와 영역별 사업과 과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네트워크가 지역 혹은 영역

별 조합을 넘어서는 전망을 갖기 위해서는 활동 내용의 질적 분석과 사회적경제차원의 지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연합과 조합으로 사회적경제를 논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의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충북에서도 사회적경제운동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역의 실업운동을 시작으로 자활사업과 사회적기업을 바탕으로 기반을 조성하고 최근에는 복지단체와 마을기업 및 자생적 공동체들과의 협의를 넓혀가고 있다. 향후에는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유구조와 운영원리는 물론 생존방식에서 그동안의 영리기업이 가진 다양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충북에서는 사회적경제센터가 지역 사회적경제운동의 사랑방 역할을 자처하면서 두 가지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하나는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현안 과제의 실현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큰 틀에서 중장기적인 지역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우선 현안 과제는 사회적기업 당사자들이 사회적 목적에 충실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지역차원의 사회적회계 도입과 사회적기업 협의회 결의를 통한 정체성 찾기에 노력중이다. 영역별로는 수년간 성과 있게 진행되고 있는 로컬푸드운동과, 자원순환포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과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지역전략화이다.

큰 틀에서는 지역의 주체를 재발견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을 설계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사회적경제조직은 영세하고 일부업종에 치우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장기적 포석을 논의 중에 있다. 금융, 제조, 유통, 지식부문으로 중장기 전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주체를 발굴하고 재생산하는 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조직간 네트워킹을 조직해 내야한다. 또한 우리 스스로 자산을 만들어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